

# 건설동향브리핑

## 제424호 (2013. 8. 12)

---

### ■ 경제 동향

- 1~7월 주택 전세 가격, 작년 말 대비 2.1% 상승

### ■ 정책 · 경영

- 하반기 실적 단가 상반기 대비 평균 0.6% 상승
- 건설 생산성 향상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 도모해야

### ■ 정보 마당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의 바람직한 역할 및 관계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건설업에 희망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1~7월 주택 전세 가격, 작년 말 대비 2.1% 상승

- 뉴타운 및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상승세,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 ■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수도권·아파트·중형 중심으로 53개월 연속 상승

- 2013년 1~7월까지의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2012년 말과 비교하여 2.1% 상승, 5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은 2012년 연간 상승률과 같은 수준인 2.1% 상승하여 지난해 6월(0.00%)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5개 광역시는 2012년 연간 상승률보다 낮은 2.1% 상승하여 5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기타 지방도 2012년 연간 상승률보다 낮은 2.0% 상승하여 5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단독의 순으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에서도 전국과 같은 흐름을 보임.

### <지역별·유형별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전체	2012년	3.5	2.1	4.6	5.7
	2013년 1~7월	2.1	2.1	2.1	2.0
단독	2012년	1.9	1.1	2.3	2.4
	2013년 1~7월	0.9	0.7	1.2	0.8
연립	2012년	2.5	1.9	3.7	5.8
	2013년 1~7월	1.2	1.1	1.4	1.9
아파트	2012년	4.3	2.5	5.5	6.9
	2013년 1~7월	2.6	2.7	2.6	2.4
연속 상승 기간		53개월	13개월	52개월	53개월

자료 : 국민은행.

- 규모별로는 중형>소형>대형의 순으로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중형>대형>소형의 순으로, 지방은 중형>소형>대형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2013년 1~7월)>

(단위 : %)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전국	1.99	2.38	1.96
수도권	1.99	2.49	2.03
지방	2.08	2.12	1.60

주 : 전용 면적 기준으로 소형은 62.8㎡ 미만, 중형은 62.8㎡이상~95.9㎡ 미만, 대형은 95.9㎡ 이상임.

자료 : 국민은행.

■ 수도권 뉴타운 및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 기록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뉴타운에 의한 입주 물량 공급 지역과 1기 신도시 지역 등에서는 3%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냄.
  - 서울 : 뉴타운 지역인 서대문구(가재울 뉴타운)와 성동구(왕십리 뉴타운)는 새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강남구 및 강서구는 지난해의 낮은 상승률로 인한 상승을 보임.
  - 인천 :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연수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함.
  - 경기 : 1기 신도시와 지난해 하락률을 보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주요 주택 전세 가격 상승 지역>

(단위 :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서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강서구	연수구	부평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안양 동안구	부천 원미구	과천	안산 단원구	용인 수지구	이천
2012년	1.8	1.3	0.6	1.5	4.1	1.8	4.1	0.0	-1.1	2.3	-3.7	3.4	-0.9	3.7
2013년 7월누적	3.1	3.8	3.8	3.1	4.5	3.4	3.5	2.8	3.0	2.9	4.9	3.1	5.5	3.2

자료 : 국민은행.

■ 전세 수요 분산 및 전세 물량 공급 유도 필요

-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활용한 주택 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2013년 6월 현재,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2만 7,194호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물량은 사업자와 기존 입주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5년 임대 후 분양이나, 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의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매매로 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전세 물량에 집중됨에 따라 매매 수요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1 대책의 취득세 감면 및 저리 대출을 받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소득 기준 상향 등을 통하여 주택 구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전세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하반기 실적 단가 상반기 대비 평균 0.6% 상승

- 실적공사비 등 현실화 방안과 2013년도 하반기 단가 -

###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등 제도에 대한 17개 개선 방안 하반기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는 2013년 1월부터 발주기관, 유관단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함.
  -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VE 제도, 타 기관 소관 사항 등 4개 분과 20개 과제 가운데 1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
- 실적공사비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공사비의 영향이 큰 주요 공종의 실적 단가 현실화를 위해 계약 단가 외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임.
  - 표준품셈의 경우도 공통 할증(안)의 적용과 공사 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할증 기준도 신설키로 함.
  - 이 외에도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의 가격을 분리하고, 장비의 상시 조사 및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함.
- 발주기관이 자의적 혹은 우월적 지위로 적용하였던 각종 관례를 개선키로 함.
  - 발주기관의 근거 없는 예정가격 삭감 조치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시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에 대한 사항이 해당됨.
- 하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 외에 적용하지 못한 2개 과제는 하반기에 예산 당국, 전문가 및 발주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계속 검토하기로 함.

### ■ 하반기 실적 단가 상반기 대비 평균 0.6% 상승

- 실적공사비 대상 항목은 총 1,945개 항목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목공사가 0.5%, 건축공사가 0.8%, 기계설비공사는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노임과 자재비 등락이 종합된 건설공사비지수가 0.7%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이번 하반기 단가집에는 기존의 1,931개 항목에서 건축공사의 26개 항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품셈에서 12개 항목을 삭제하여 총 1,945개 항목으로 확정함.
  - 건축공사의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및 기계설비공사의 강관 용접 등이 포함됨.
  - 품셈에서 삭제된 항목은 규격이 삭제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종임.
- 국토교통부의 공사비 태스크 포스 활동 조치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의 기준이 8월 5일부로 제정되었음.
  - 실적 단가와 현실 단가 간에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한 계약 단가 외에 시장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의 보정 방안을 수록하고 있음.

## ■ 실제 조치를 위한 공공 부문의 융통성 확보 필요

- 일단 실제 시장 가격을 실적 단가에 반영하는 체계가 확립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반영 사례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실적 단가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의 운용에 있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근거에 대한 융통성 있는 수용이 요구됨.
  - 하도급 계약서 등의 공식 문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실제 시장 가격에 대한 다양한 소스의 청취 경로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실적공사비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
  - 2004년에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는 지금까지 산업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각이 큰 이유는 제도 도입의 본질과 상관 없이 실적공사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불신감이 크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일부 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함.
- 합리적인 자금과 노력을 투입한 실적공사비 2.0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 주도가 아닌 민관이 연합하여 산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 건설 생산성 향상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 도모해야

- 건설산업의 생산성 실태 및 사업 기능별 · 참여 주체별 대응 방향 -

## ■ 건설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

- 건설 생산성은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며,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건설 생산성의 저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비의 증가를 유발하며,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감소로 연결됨. 또한,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 인력 및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저 생산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작업 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노동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며, 실업률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 · 경제적인 낭비도 증대됨.

## ■ 건설산업의 생산성 실태

- 건설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 측면에서 생산성을 대변하는 지표들을 보면, 건설업체의 생산성 관련 경영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건설업체의 생산성 관련 주요 경영 지표 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자본투자효율	15.6	14.7	15.8	11.5	10.7	11.1	10.6
설비투자효율	86.6	89.6	109.7	76.6	64.5	69.3	74.4
부가가치율	15.7	15.8	17.6	14.3	12.9	13.5	12.4

자료 : 통계청.

- 아울러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최근 5년 간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타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0년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 할 때, 전 산업 평균보다 25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및 타 산업과의 비교 >

(단위 : 201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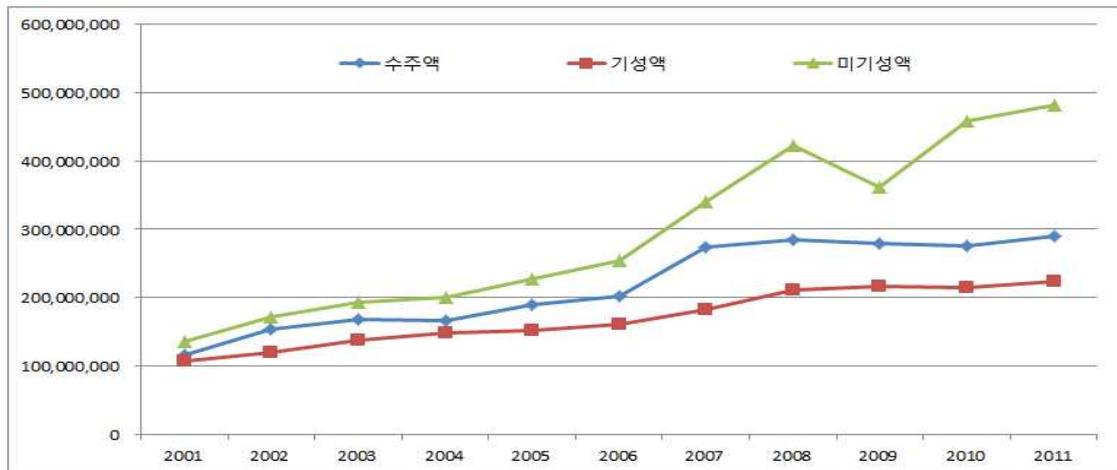
규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산업	110.3	119.0	100.0	87.9	79.2
제조업	88.3	90.8	100.0	102.5	103.5
전 산업	92.4	93.8	100.0	103.3	104.3

자료 : 통계청.

- 건설업체들의 기성 실적을 통해 건설 생산성 실태를 분석해보면, 2001~05년까지는 기성액과 미기성액<sup>1)</sup>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국내 건설산업의 수주액 · 기성액 · 미기성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

## ■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 방향

- 건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 관리적인 접근이 요구됨.
  - 건설사업의 관리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그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함. 이는 빠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성에 기반한 계획의 수립과 참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생산성을 향상시킴.
  - 건설 인력 및 노동의 측면에서는 건설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건설 생산성의 향상에 있어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 발주자(정부)는 발주 과정에서 건설 생산성의 향상을 유도하는 절차와 규정, 법률을 마련해야 하며, 건설사업의 수행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확대해야 함.
  - 건설업체는 건설 생산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 ·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시행, 이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해야 함.

김영덕(연구위원-산업 · ydkim@cerik.re.kr)

1) 미기성액이란 당해 연도 기성액을 달성하지 못해 익년도로 이월 수행되는 금액으로, 기성액과 차이가 클수록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의 바람직한 역할 및 관계

-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증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 ■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새로운 인식 필요

- 2010년 11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화된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도 100%를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의 환경도 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정책 당국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공급'에 치중하던 데서 공동주택관리전문가위원회와 우수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구성,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주택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업체 간에 공동주택 관리의 의결권과 집행권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적지 않아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합리적 역할 분담의 모색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의결권과 집행권의 적절한 안배는 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입주자 만족도에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과 권한

- 입대의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주민의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 입대의는 주택 관리업자의 선정, 하자보수청구권 외에도 각종 자치 규약 개정권, 예·결산 승인권,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또는 조정권 등을 가짐.
  - 법원도 '입대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 결정 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 관리 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여 독립적인 단체로 간주함(대법원1991.4.23.선고 91다4478 판결).

## ■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범위 및 책임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상 ‘관리 주체’이며, 공동주택 관리 조직의 기구(또는 기관)의 담임자를 지칭함.
  - 관리사무소장의 담임 자격 요건과 엄격한 책임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 자치의 주요 대상인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위한 부분적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법」 상에 광범위한 업무 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음.
  -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보다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업무 수행의 사회적 요구 미반영

## ■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위한 시사점

- 주택법령은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대의와 관리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는 일종의 ‘Two-Top 체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향후 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관장하되, 중요 사항은 ‘입대의 의결을 조건으로’ 관리 주체가 유효하게 업무 집행하도록 제도 구축 필요
- 기타 입대의 법인화, 관리 규약에 입주자의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적 제재 권한 부여, 전문성 강화 등 입대의와 관리 주체 간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공동주택 관리의 장기적·체계적 발전과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 1	새누리당 안종범 국회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서민 주거 환경 개선 관련 토론</li> </ul>
8. 5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토의</li> </ul>
8. 7	한국수력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li> <li>-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심의</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민간 전문가로 참여</li> </ul>
8. 8	대한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통계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li> <li>- 주제 : 건설 통계 현황 및 개선 사항</li> </ul>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원자력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정책과 주최, '세제발전심의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ul>
	내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주택연구원 주최, '2013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내부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li> <li>- 주제 : 부동산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li> </ul>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들어 국내 건설산업이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맞춰 국내 건설기업도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li> <li>-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수명 주기 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성숙기 산업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과연 국내 건설산업이 이러한 성숙기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li> <li>-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숙기 산업에 속한 기업의 대응 전략 유형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성숙기 산업에 속한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li> <li>•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성숙기 산업은 해당 산업 내 주요 제품들이 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도달한 제품들로 이뤄진 산업으로 정의됨.</li> <li>• 성숙기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성숙기 산업은 시장 규모의 정체, 제품 혁신 속도의 둔화, 높은 경쟁 강도, 치열한 가격 경쟁, 수익성 하락 등의 특성을 지님.</li> </ul>

## 건설업에 희망을

어릴 적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애벌레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눈부신 노랑나비가 되어 하늘로 비상한다는 줄거리였다. 작은 애벌레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눈부신 비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던 것 같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

요즘 건설업계는 너무나 어려워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4년째 지속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4.1 대책 이후 반짝했던 부동산시장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여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여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해외건설도 저가 수주의 논란 속에서 수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1.9%를 기록하였고, 영업현금흐름은 업체당 -71억원이었다. 이러다보니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업의 예상 부도율은 해운(8.5%)이나 조선(5.9%)보다 높은 9.1%를 기록하여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 다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서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재의 상황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다보니 분리 발주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확대 등의 제도 변화가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보다는 자신의 일거리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만 초점을 맞춰 찬반을 거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의 룰을 정하는 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희망과 비전이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정책 제시가 간절하다.

<서울경제, 2013. 6. 26 >

김민형(건설정책연구실장 · mhkim@cerik.re.kr)